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하라!

한국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일제강점기에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정보조회’를 통보하여 ‘보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숨기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한국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특히 우리는 이코모스가 일본 정부에 추가적인 권고로 “설명과 전시에 대해 메이지 이후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다루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2015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은 합법적’이었다며 강제노동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왜곡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히고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까지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외교로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연대하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문제에 대해 가이드북 발간, 홈페이지 제작, 현지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응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현지조사와 한국의 유족조사를 바탕으로 『한일시민공동조사보고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노동』(2022년 10월)을 펴내고, 연구집회, 전시 등을 통해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실태를 알리는 데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4월 현지조사에서는 미쓰비시머티

리얼의 자회사 ‘골든사도’(사도광산 운영기업)가 보유한 1,519명의 조선인 동원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광산사’ 원본도 확인했다.

사도에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노동의 고통 뿐 아니라 해방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사도광산에서 당한 강제노동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지금 니가타현립문서관에 있는 1414번 자료, ‘반도 노무자 명부’는 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나 니가타현과 사도광산 측은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밝혀질 역사의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니가타현과 미쓰비시머티리얼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광산에서 1,5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사료와 증언으로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대로 사도광산이 전체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때만이 보편적인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로 자랑하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하고 역사정의를 봉인한 허울뿐인 관계개선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한일관계 개선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어설픈 눈가림으로 강제노동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굴종외교를 고집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사도광산은 하시마(일명 군함도)에 이어 역사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환영받지 못하는 유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7월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응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역사를 밝히고 기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6월 7일

민족문제연구소